

전북도,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기반 조성

문화예술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추진… 67명 일자리 지원 1인당 65만원씩 · 5~12월까지 최대 8개월 지원

전북도가 공연예술분야 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문화예술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단체 공모를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도내 공연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연인력 인건비를 1인당 65만원씩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공연예술분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및 협동조

합이다.

신청단체는 총 20회 이상의 공연 개최, 1인 인건비 매달 35만원 이상 자부담 매칭, 관련 전공자 또는 5년 이상 관련 경력자 채용 등의 지원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분석을 담당할 '평가·모니터링 주관단체 공모'도 동시에 진행한다.

문화예술일자리사업에 선정된 단

체별 사업운영에 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전북도청 문화예술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공고/고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예술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분야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연예술인의 안정된 일자리로 우수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창작역량을 강화해 공연예술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2022년 1월 중 업무성과가 특월해 전북의 위상을 빛낸 4개 부서를 대상으로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의 위상 빛낸 이들에게 큰 상을

전북도, 1월의 으뜸 도정상 시상… 감사관실 '최우수' · 농산유통과 등 '우수'

전북도가 2022년 1월 중 업무성과가 탁월해 전북의 위상을 빛낸 4개 부서를 대상으로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우수 부서에 감사관실, 우수부서에 농산유통과, 주택건축과, 국제교류센터가 선정됐다.

감사관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73개 전국 공공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최고 1등급 달성'으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농산유통과는 병해충 피해에 대한 정부 대응 약 4개월(9~12월)만에 농

업재해로 공식 인정돼 2만2405㏊가 4만4,981㏊, 365억원 복구지원이 확정됐다.

또한 농업재해 인정과 더불어 병해충 피해 면적과 비중 매입을 적극 건의한 결과, 전량 매입 확정으로 농가 안정적 판로 선제적 역할과 도정 앞 1년 3개월간 방지된 곤포 사일리지지를 철거 완료했다.

주택건축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및 수시 전문가 조언 및 상담을 통해 전국 유일한 경제기반형 사업 등 2개소가 선정돼 국비 350억 원을 확보

했다

아울러 2022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전국 2위'로 2개소가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국제교류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 주관 '2022년 정부부처 제언사업(글로벌 연수)' 공모에 선정 됐으며, 전북도 최초 국가 ODA 사업 수주 및 3년간 국비 4억 8천만 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이달의 으뜸 도정상 선정부서에는 격려금과 함께,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가점을 성과로 부여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자치분권 2.0시대… 文정부 자치분권 성과 공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제시의회서 특강

김제시의회가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최된 이번 특강은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념과 주요 특징 및 미래의 지방자치 환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빌미로 전해진다. 김순은 위원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권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인 자치분권 6법의 완성과 의의를 설명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현재 2단계 추진 중인 재



김제시의회가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분권의 결합으로 국민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종양과 지방간 협력관계의 정립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치분권 1.0 시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자치분권 2.0 시대는 시민을 중심으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리가 커지는 만큼 의회는

더욱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방자치의 흐름을 선도하는 김제시의회가 될 수 있는 기초 역량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우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주민인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시 등 10개 시·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위해 피해지역 내 고사목과 우려목을 제거하기 위한 방제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제는 지난해 4월부터 예찰을 통해 발견된 재선충병 김영목 및 김영우려목, 기타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

충 우화기전인 3월 말까지 전량 제거 할 방침이다.

또한, 공원과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활권 주변 우량수목, 대면적 산림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신림 등에 대한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해 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한다는 계획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도로 입도, 운재로 등 접근

로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대상목은 전량 수집해 파쇄하고, 운반이나 어려운 암석지, 급경사지 등의 방제목은 훈증·그물방을 이용해 처리한다.

도는 직접방제와 더불어, 연중 소나무류 무단이동단속 및 항공예찰도 병행해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16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서 센터 활동지원팀원들을 비롯해 Life in local la, 릴피스 등 사회혁신전주 입주팀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형 사회혁신 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 활성화"

조지훈 전 경진원장, 전주사회혁신센터 찾아

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세명 대표는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위해 전주형 공동체 주택 추진을 정영아 대표는 동물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윤애아 대표는 장애인들의 아동권 확대 및 접근성 개선 등이 전주의 혁신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혁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이에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전주의 혁신을 위해 기준을 바꾸는 일부터 하려고 한다"며 "행정시스템 역시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편리하게, 명쾌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신규택지 개발로 아파트 3만세대 공급"

유창희 전 부의장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전주시민들의 행복한 주거복지 위해 일정 내 3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유 부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 아파트 가격 폭등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 뿐 기세력이 학제화되면서 벌어졌다"고 진단한 뒤 "신규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발 예정지로 전주역세권 개발과 이코노시티 2단계 사업지구 및 여의지구 등을 제시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면 일정 내 3만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주형 청년 일대주택 도입과 전주시의 '부동산거래조사단' 운영 강화도 함께 제시했다. /김윤상 기자



"종합경기장 개발 부분 착공 전면 유보"

임정엽 전 완주군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다음 달 착공 예정인 종합경기장 부지 공사를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전 군수는 다음 달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7억 원이 투입되는 '정원의 숲' 조성공사가 사실상 본격 공사를 시작하는 기점이 된다고 지적하고 공사 절차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원의 숲 공사가 전체 공사 규모의 3%에 그친 반면 나머지 사업 내용을 좌우할 수 있는 비중을 갖고 있는 점,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종합경기장의 핵심사업이 정부의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분 착공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크다는 것.

그는 또 출마예정자들이 제시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이 이제 착수할 예정인 개발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용도의 충돌 등으로 알려졌다.

임 전 군수는 개발 구상이 8년째 빙자되면서 한 종합경기장을 임기 마감 5개월 가량 앞두고 전격 착공하는 것은 행정력과 시민의 세금마저 낭비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윤상 기자



등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전면 유보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추진할 예정인 '정원의 숲' 조성 공사는 야구장 옆 청소 차량 차고지와 양궁장 이전 부지 4,100㎡에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옮길까지 진행하며 '동경 담은 정원'과 '초화언데 숲', '마당 품은 길' 등 3개의 테마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군수는 개발 구상이 8년째 빙자되면서 한 종합경기장을 임기 마감 5개월 가량 앞두고 전격 착공하는 것은 행정력과 시민의 세금마저 낭비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윤상 기자